



[뉴스] 현대·한국지엠 부품업체와 상생 위해 140억 쾌척 02



Economy

코스피	2176.78 (-18.91)	코스닥	757.06 (-1.56)
금리 (연이자율)	0.837 (-0.003)	환율 (원/달러)	1196.40 (+5.20) (11일)

# 금융 신원확인도 ‘언택트’

##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대면’ 전제 본인확인 방식 정비 소비자 요구반영 3분기중 마련 이달부터 기안금 지원 신청 개시 P-CBO 1조 이상 추가 지원도

본인확인 규율체계가 금융실명제 제정 30여년 만에 새롭게 정비된다. 본인확인 방식이 기본적으로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트리거(방아쇠)가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실명법은 계좌개설, 즉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잡아 왔지만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다”며 “건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3분기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함께 금융보

안도 강화한다. 은 위원장은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이달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P-CBO(신용보증강화유동화증권)는 1조원 이상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발표된 기업 자산매각 지원방안에 따라 캠퍼가 자산시장의 공적 수요자로 시장에 참여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겠다”며 “여전히 잘 안된다는 지적이 많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우

선순위에서 밀렸던 혁신금융도 본격화한다.

그는 “‘혁신기업 1000’을 본격 가동하겠다”며 “다음 달 초에는 1차 지원대상 기업군 20개를 선정하고, 쉽지 않겠지만 올해 중 200여개 혁신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강점으로 부각됐던 의료, 바이오,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로는 다음달 아시아 최대의 창업보육공간 ‘마포 프런트(Front)1’이 문을 연다. 지상 20층, 광화문 광장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업무·네트워킹·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포용금융 정책으로는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그는 “이달 말부터 캠퍼에서 2조원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소비자이용법 제정안’을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연내 5.8조 기업 투자 발굴 공공투자 60.5조 100% 집행”

## 제6차 비상경제 중대본회

100조 규모 투자 프로젝트 가속화 민간일자리 15만개 사업 내달 시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월 중 민간일자리 15만개를 만들어 공급하는 등 100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해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공공 60조5000억원 ▲민간 25조원 ▲민자 15조2000억원 사업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5조8000억원 상당의 기업 민간투자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공공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민자사업 5조2000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α 규모를 신규 발굴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근로제도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규제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한 단축,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요건 완화,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각종 시장 진입규제와 기업 비용·행정 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 애로들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추진 계획을 밝힌 ‘55만개+α 직접일자리’와 관련된 7월 중 민간일자리 15만개 사업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15만개 일자리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 5만개 등이다. /한용수 기자 hys@



다시 날아오를 그 날을 위해 11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정비사들이 A-380 항공기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정비 작업은 항공기 ‘단기 보관(장기 주기)’에 대비한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단기 보관 중인 항공기의 경우라도 언제든지 운항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공기 외부, 타이어, 랜딩기어, 전자장비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체크가 실시됐다. /연합뉴스

#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하락

‘네 마녀의 날’ 변동성 확대 기관, 2년 만에 최대 순매도

코스피가 10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하며 2170선으로 후퇴했다. 기관투자자는 2년 만에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8.91포인트(0.86%) 내린 2176.78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1201억원, 기관이 1조1805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조2665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의 순매도는 2018년 5월 31일(1조2384억원)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컸다. 개인 순매수도 지난달 4일(1조7001억원)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네 마녀의 날’을 맞아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네 마녀의 날은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 개별주식선물이 동시에 만기되는 날을 뜻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195.69)보다 18.91포인트(0.86%) 내린 2176.78에 장을 마감했다. /뉴스1

다.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1100원(1.99%) 내린 5만43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2.53%), 네이버(-1.43%), 삼성전자우(-0.83%), 현대차(-2.69%)도 하락했다. 반면 셀트리온은 램시마가 영국에서 임상시험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7.26%나 급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6.11%)와 LG화학(5.23%)도 5% 이상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6포인트(0.21%) 내린 757.06에 거래를 끝냈다. /송태화 기자 avin@

#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코로나 정국 힘로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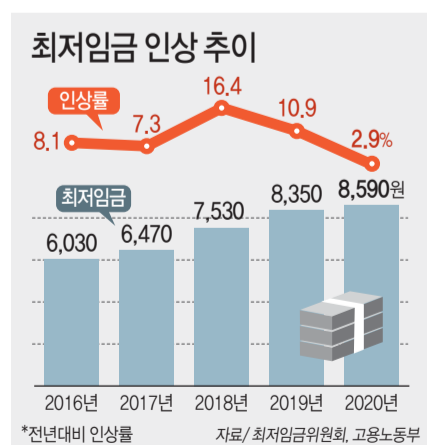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빠격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 불참

‘소폭 인상이나, 동결이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11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최저임금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치닫고,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등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 재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최저임



금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임위원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자리가 상견례를 겸한 첫 만남이긴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이 추천한 위원 4명은 이날 불참했다. 근로자위원 9명 중에는 민주노총 추천위원이 4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위원이 5명이다.

이날 예정된 첫 전원회의를 놓고 당초 민주노총측은 위원들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최임위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정 추가 조율 없이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해 결국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은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별도로 이날 오전 한국노총과 최임위 노동자위원 간담회를 갖고 당일 회의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요구안은 향후 양대노총 추가 회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